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s Youth Policy among Korean 20s and 30s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Young-Mi Kim(dezember26@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 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 청년들의 72.1%가 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당수 청년들이 청년지원정책(49.5%)과 일자리지원정책(59.7%)에 대한 지출이 현재수준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청년수당 제공에 대해서는 24.1%만이 찬성했다.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청년 내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와 특히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상당했다. 청년들은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와 인식을 보였다. 한국청년들은 대체로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는데, 불평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지원에 대한 욕구와 선호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삶의 현실과 청년 내부의 이질적 욕구 및 인식수준을 반영한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청년 세대 | 청년정책 | 복지태도 | 청년수당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young Koreans' welfare attitudes towards youth policy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n such attitud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Many young people(72.1%) understand that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youth support and spending on youth support policy(49.5%) and job support policy(59.7%) should be expanded than current level. But only 24.1% approved the provision of youth allowance. There was a significant in-group heterogeneity among the young generation in terms of support for expanding fiscal spending for youth policy and youth allowance provision.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sex,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type of housing affect attitudes towards youth policy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m was different according to each analytic model. Korean young adult generally perceived that our society was unequal and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the higher support for youth policy. These results implicates that in-group heterogeneity among youth generation in terms of socio-economic needs and subjective perception should be regarded as important factor in the youth policy making process.

■ keyword : | Young Generation | Youth Policy | Welfare Attitudes | Youth Allowance |

I.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현재 청년이 화두다. 그동안 청년은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 이행기, 준비기라는 모호한 속성으로 인해 사회정책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선별적 복지정책 기조 속에서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정책의 주요대상이자 우선순위로 간주되면서, 청년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성은 논의되지 못했다.

2007년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 세대'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3포, 5포, 7포, N포 세대' 등 청년들의 생활전반과 미래전망의 불안정성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문제는 정치적·사회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정성, 교육비 부담, 고용·결혼·출산으로의 더딘 이행 등의 심각성은 청년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결부된 문제로 간주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청년지원은 일자리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8년 이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해 청년고용사업 재정지출 규모는 2008년 4,721억 원에서 2015년 1조 3,425억 원으로 3배 증가했으나, 청년(만 15-29세)실업률은 2017년 2월 사상 최고치인 12.3%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4.1%에 달하고, 교육·훈련·취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니트(NEET)청년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1].

최근 청년 소득지원정책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청년지원이슈는 정치적·사회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2015년 11월, 서울시는 만 19-29세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 청년 대상 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도 만 19-24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이어진 치열한 찬반논쟁과 정치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은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청년이슈 제기, 청년을 둘러싼 담론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이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청년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정책의 시행은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전제되는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때 문제의 객관적 상황과 정책수요자인 수혜자의 욕구, 주관적 인식은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간 청년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청년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주목해 왔다[2-4]. 하지만 문제의 당사자이자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청년지원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령, 세대는 하나의 영향요인으로만 포함되어 있다. 청년을 포함한 '세대'의 복지태도에 주목한 연구들이 존재하나, 대부분 일반적인 복지태도에 주목하고 있다[5-9]. 정작 청년들 스스로 청년지원의 필요성,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어떤 인식, 태도를 갖고 있는지, 청년 내부의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한다면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들이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청년의 정책인식에서 균열의 지점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청년들은 국가의 청년지원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지지하는가? 정책 수요자들의 지지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은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년들은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유사한 인식과 태도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이질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한국사회의 계급과 불평등을 연구한 신광영(2009)은 세대 내 불평등이 세대 간 불평등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고[10], 세대별 기회불평등 영향요인을 연구한 김영미(2016)는 중장년층,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 내에서 주관적 인식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11].

현재 청년정책은 구축 중이며,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청년에 대한 개념정의, 청년지원의 정책수단과 내용 등은 논의 중이다. 이 연구는 향후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내부의 특성 차이를 고려한 촘촘한 정책설계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복지태도의 개념과 영향요인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는 “복지에 대한 규범적 신념, 믿음, 견해”로[12],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 소득 불평등, 재분배, 복지국가에 대한 총체적 인식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13]. 연구에 따라 복지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대체로 정책에 대한 정부책임성 인식, 정책지출 증감에 대한 태도 등으로 측정했다[6][14-16]. 최근 한국의 복지논쟁이 정책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설계 방식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보편-선별복지에 대한 선호 등 복지태도의 차원은 다양해졌다[5][6][9][17].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지적한다. 첫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해관계(self-interest)이다. 이해관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 빈곤, 실업 등 사회적 위험 노출정도, 소득, 자산 등 자원 보유정도에 따라 달라진다[18][19]. 이에 따르면 학생, 실직자, 저소득층, 불안정고용층 등이 친복지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hn(2000)은 개인의 복지지위(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 제공자)가 복지태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형성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복지수급자일수록, 납세부담이 낮을수록, 복지서비스 종사자일수록 친복지 성향을 보일 수 있다[2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성별, 연령(세대), 학력, 고용지위, 가구소득 등을 이해관계와 관련된 요인으로 보았다. 이상록·김형관(2013)은 20·30대, 저소득층인 경우 복지지출 확대를 지지한다고 했다[6].

둘째, 개인의 신념, 이데올로기적 지향인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21],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빈곤층에 대한 복지확대를 지지했다[22].

2. 청년세대의 복지태도와 영향요인

복지태도 연구에서 ‘세대’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Svallfors(1991)에 따르면 실업, 빈곤위험 증가에 따라 청년층의 복지 의존이 높아져 청년층일수록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상록·김형관(2013)은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 기초한 의식 및 태도의 동질성 및 차별성을 기준으로 한” 코호트(세대)의 동질성에 주목하고, 세대 간 복지태도 차이를 비교했다.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신세대(1972년생 이후)로 구분했는데, 보편복지 지향, 복지정책지출 확대, 증세에 대해 신세대가 산업화세대보다 지지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주희(2014)는 세대 간, 세대 내 차이에 주목했는데, 임금근로자에 한정해 세대별(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고용형태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정책 만족도와 선호를 비교분석했다. 청년층의 복지만족도에는 정규직 여부(비정규직이 높음), 복지국가 선호에는 정치적 진보 의식(진보적일수록 높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8].

청년세대의 복지태도에 주목한 연구는 이훈화·김윤태(2012), 이정화·문상호(2015), 유정호·조민호(2016), 최유석 외(2015) 등인데[5][7][9][24], 앞의 두 연구는 청년층의 복지태도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한계적이다. 이훈화·김윤태(2012)는 Q방법론을 이용해 대학생의 복지태도를 보편적 복지·선별적 증세형, 선별적 복지·증세 반대형, 혼합적 복지·선별적 증세형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5]. 서울·인천지역 4년제 대학생 21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이정화·문상호(2015)는 청년층보다는 근로연령층에 주목해 30대와 40대의 복지태도(선별/보편복지 선호) 영향요인을 분석했다[9]. 최유석 외(2015)는 대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노인세대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는데, 세대 간 재분배를 둘러싼 정책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24].

유정호·조민호(2016)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응답자 365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의 복지의식 경향과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복지의식은 4개 차원으로 측정했는데,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찬반 태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생각,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긍정-부정 태도이다.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을 고부담·잔여적 복지형, 제도적 복지형, 잔여적 복지형, 저부담·제도적 복지형 4개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청년세대의 복지의식은 선별주의(56.4%), 보편주의(43.6%)가 혼재되어 있고, 증세 찬반 역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3%가 반대). 이 연구는 청년세대의 복지인식, 태도가 개인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따라서 청년세대 내의 사회적 합의도출이 향후 복지국가 향방에 중요함을 시사했다[7].

정리하면, 현재 한국인의 복지태도 연구에서 세대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세대 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에 비해 세대 내부 차이에 주목한 연구는 더 적다. 그간 회자되어 온 88만원 세대, N포 세대 등의 용어는 세대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으나, 소위 ‘수저계급론’은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화된 세대 내 불평등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11].

지난 총선과 대선을 지나면서 많은 청년지원정책 공약들이 제안되었고, 다가올 지방선거 역시 지자체별로 다양한 청년정책공약들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청년지원에 대해 어떤 요구,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청년 다수가 필요로 하는 보편적 요구와 집단에 따라 상이한 선별적 요구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회정책연구그룹(연구책임자: 안상훈 교수)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원으로 실시한 ‘2016년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자료를 이용하

였다.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9명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 표집은 2016년 8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구성비를 반영해 다단계 층화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했다. 이 조사는 개인의 복지인식 지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2006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었다. 복지인식조사의 준거들이 되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 포함된 문항들을 토대로 하되, 조사 당시의 사회정책 현안과 이슈에 관한 인식문항들을 포함해 왔다. 청년지원에 관한 복지인식 문항은 6차 조사에 추가되었다[13].

분석대상은 2030 세대에 해당되는 만 19-39세 434명이다. 청년의 연령범위 규정은 국가, 사회적 통념, 법령 및 정책의 목적에 따라 상이한데, 이 연구에서는 군복무, 교육기간 연장, 고실업으로 인한 입직 지연, 만혼, 만산 등 생애과정의 전환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20대와 30대를 청년세대로 보았다. 현재 유일한 청년지원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를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이 추진 중인 청년기본법안들 중 일부는 만 39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1월 서울시가 최초로 제정, 시행한 후 현재 14개 광역지자체와 46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조례의 경우도 만 19-34세 혹은 만 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1].

2. 분석변수의 정의와 측정

2.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가지 차원으로 측정한다. 청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청년들은 청년자립지원을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층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인 청년수당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본다.

표 1. 종속변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변수 정의 및 측정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성 인식	청년층 자립지원이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정도(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책임
청년지원정책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	청년층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이 현재보다 확대 혹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지출증가 선호
일자리지원정책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이 현재보다 확대 혹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지출증가 선호
청년수당 제공에 대한 태도	청년수당 등 현금성 소득지원 제공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

2.2 독립변수

기존 복지태도, 청년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표 2]에 제시된 요인들을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청년 내부 집단별로 처한 사회적 위험과 보유한 자원, 한국사회의 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청년들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상이한지 검토한다.

표 2. 독립변수 정의 및 측정

변수명	변수 정의 및 측정
성별	(기준:남성) 남성=0 여성=1 더미변수
연령대	20대전반(만 19-24세)을 기준으로 20대후반(25-29세), 30대전반(30-34세), 30대후반(35-39세) 더미변수 3개
교육수준	(기준: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졸 이상 더미변수 2개
고용상태	(기준: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자·가사·육아 종사자, 학생·직업훈련생·실업자·비임금근로자 더미변수 3개
혼인상태	(기준:기혼·동거·이혼) 미혼=1 더미변수
주거형태	(기준:자가) 전세, 월세 더미변수 2개
가구소득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한 가구총소득의 자연로그 값
불평등인식	우리 사회의 불평등정도에 대한 인식 7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사회라고 인식)

3. 분석방법

먼저, 청년세대의 특성,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청년세대 내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년정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IV. 연구 결과

1. 청년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년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청년세대 인구사회학적 특성 (N=434)

특성	구분	%
성별	남성	51.4
	여성	48.6
연령대	20대 전반	28.8
	20대 후반	20.7
	30대 전반	20.5
	30대 후반	3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7
	대학 재학	11.3
	대졸 이상	56.0
고용상태	임금근로자	48.4
	자영자·고용주	17.3
	학생·직업훈련생·실업자	24.7
	가사·육아	9.7
혼인상태	미혼	62.9
	기혼	36.8
	이혼	0.2
주거형태	자가	62.7
	전세	22.3
	월세	15.0

임금근로자 48.4%와 자영자·고용주 17.3%로 65.7%의 청년이 취업상태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전반은 62.4%가 학업·직업훈련·실업 중이었고, 37.6%만이 임금근로자였다. 20대 후반은 임금근로자 68.9%, 자영자·고용주 10%로 취업자 비율은 2배로 증가했다. 30대 전반은 임금근로자 50.6%, 자영자·고용주 27%, 가사·육아 13.5%였고, 30대 후반은 임금근로자 43.1%, 자영자·고용주 32.3%, 가사·육아 19.2%였다. 연령대별 혼인상태를 보면, 20대 전반의 98.4%, 20대 후반의 80%, 30대 전반의 49.4%, 30대 후반의 26.2%가 미혼이었다.

한국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불평등 정도는 평균 2.99점(표준편차 1.12)이었다. 이는 보통수준인 4점보다 낮아 대체로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총소득 평균은 449.3만원이었다.

2. 청년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한국의 청년들은 청년자립지원이 정부책임이라는 데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 청년지원정책,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현재수준보다 확대, 축소 혹은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 청년수당과

같은 현금수당 지원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

표 4.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분포 (N=434)

태도 유형	변수값	구분	%	평균(SD)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성 인식	1	당연히 아님	4.1	2.90 (0.78)
	2	대체로 아님	23.7	
	3	대체로 정부책임	50.0	
	4	당연히 정부책임	22.1	
청년지원정책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	1	훨씬 덜 지출	2.1	3.47 (0.94)
	2	좀 덜 지출	12.0	
	3	현재수준 유지	36.4	
	4	좀 더 지출	35.9	
	5	훨씬 더 지출	13.6	
일자리지원정책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	1	훨씬 덜 지출	1.2	3.66 (0.87)
	2	좀 덜 지출	7.1	
	3	현재수준 유지	32.0	
	4	좀 더 지출	44.0	
	5	훨씬 더 지출	15.7	
청년수당 제공에 대한 태도	1	매우 반대	13.1	2.68 (1.06)
	2	반대	34.3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28.3	
	4	찬성	20.0	
	5	매우 찬성	4.1	

[표 4]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청년의 72.1%가 청년자립지원이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본 분석자료로 추가분석한 결과, 20대의 74.4%, 30대의 69.9%, 40대 이상의 69.8%가 청년자립지원이 정부책임이라고 인식해 청년자립지원정책이 개인, 가족이 아닌 정부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는 데는 대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자립지원이 정부책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청년이 27.8%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출이 현재수준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청년의 49.5%가 지지했고,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많은 59.7%가 지지했다. 일자리지원정책은 2030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40대 이상(52.6%)에서도 정부지출 확대 지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의 36.4%가 지출수준 유지를, 14.1%가 현재수준보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항질문에서 정부지출 증가를 위해서는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 증가가 필요함을 명시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증세를 동반한 정부지출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청년 내부 어

느 집단 간에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도입·시행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청년수당 제공에 대해서는, 청년의 24.1%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3%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 혹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절반에 가까운 47.4%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령대별 청년수당 찬성비율을 보면, 20대는 29.8%, 30대는 18.7%, 40대는 18.3%, 50대는 12.6%, 60대는 18.4%로 20대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찬성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3.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의 청년세대 내 차이

청년들은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유사한 인식, 태도를 보이는가, 아니면 개인 혹은 가구 특성 등 귀속집단에 따라 이질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표 5]는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평균차이의 유의미성 확인을 위한 t-test와 ANOVA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은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4개 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 차이는 청년수당에 대한 태도에서만 존재했다. 20대 전반(2.98) 청년이 30대 후반(2.36) 청년보다 청년수당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실시 중인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만 19-24세를 지급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 연령대의 향후 수혜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업수행 등으로 비취업 비율이 가장 높아 소득지원의 필요가 가장 높은 20대 전반기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도 있다.

교육수준별 차이는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와 청년수당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났다. 대학재학 중인 청년이 고졸이하 청년과 대졸이상 청년보다 지출 확대, 청년수당 제공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역시 연령대와 유사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고용상태별 차이는 청년수당에 대한 태도에서만 나타났다. 근로활동 중인 청년 간에는 태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학생, 직업훈련생, 실업 청년이 가사, 육아 중인 청년보다 청년수당 제공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가사·육아 중인 청년이 대부분 30대에 분포

표 5.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의 청년세대 내 차이

특성	구분	청년자립지원 정부책임성 인식		청년지원정책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		일자리지원정책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	
		평균	평균차이 검증결과	평균	평균차이 검증결과	평균	평균차이 검증결과	평균	평균차이 검증결과
성별	여성	2.93	t=0.845	3.49	t=-0.528	3.70	t=0.881	2.70	t=-0.535
	남성	2.87	(p=0.399)	3.44	(p=0.598)	3.62	(p=0.379)	2.64	(p=0.593)
연령대	20대 전반(a)	2.94	F=1.622 (p=0.184)	3.62	F=2.08 (p=0.102)	3.71	F=1.986 (p=0.115)	2.98	F=7.530*** (p=0.000) d<a
	20대 후반(b)	3.03		3.45		3.81		2.73	
	30대 전반(c)	2.84		3.47		3.59		2.64	
	30대 후반(d)	2.90		3.33		3.54		2.36	
교육수준	고졸 이하(a)	2.96	F=2.866 † (p=0.058)	3.41	F=3.364* (p=0.036) a,c<b	3.54	F=1.935 (p=0.146)	2.64	F=3.648* (p=0.027) a,c<b
	대학 재학(b)	3.08		3.80		3.73		3.06	
	대졸 이상(c)	2.83		3.44		3.71		2.62	
고용상태	임금근로자(a)	2.85	F=0.846 (p=0.469)	3.41	F=0.182 (p=0.143)	3.60	F=2.052 (p=0.106)	2.63	F=3.041* (p=0.029) d<c
	자영자, 고용주(b)	2.91		3.41		3.81		2.58	
	학업, 훈련, 실업 등(c)	3.00		3.65		3.74		2.93	
	가사, 육아(d)	2.88		3.40		3.48		2.43	
혼인상태	미혼	2.91	t=0.386 (p=0.700)	3.55	t=-2.298* (p=0.022)	3.71	t=1.734 (p=0.084)	2.81	t=-0.341** *
	기혼, 이혼, 동거	2.88		3.33		3.57		2.45	(p=0.001)
주거형태	자가(a)	2.92	F=0.209 (p=0.811)	3.57	F=5.197** (p=0.006) b<a	3.76	F=5.723** (p=0.004) c<a	2.78	F=5.026** (p=0.007) b<a
	전세(b)	2.86		3.22		3.54		2.38	
	월세(c)	2.91		3.43		3.40		2.71	

*** p<.001 ** p<.01 * p<.05 † p<.10

되어 있는 연령효과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주거형태별 차이는 청년지출, 일자리정책 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와 청년수당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났다. 자가에 사는 청년이 전세에 사는 청년보다 지출 확대와 청년수당에 더 우호적이었다. 월세 등 주거비부담이 큰 청년들이 청년층지원과 청년수당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추측되나 상반된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부모와의 동거 요인이 고려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청년의 62.7%가 자가 거주 중인데, 20대 전반은 74.4%, 20대 후반은 68.9%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로 인해 20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20대 청년의 84.8%, 30대의 38.2%가 부모와 동거 중이었는데[4], 심각한 취업난과 취업을 해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인 상황은 한국 청년의 부모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청년소득지원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을 수 있다.

4.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하위차원 4개에 대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6]과 같이 4개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고, 독립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다.

먼저,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성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교육수준과 불평등인식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대졸청년보다 중졸·고졸청년이, 그리고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청년자립지원이 정부책임이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정책, 대졸청년 위주의 고용지원정책 위주로 청년정책이 이루어져 온 상황 속에서, 중졸·고졸 청년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 수립 시 중요하게 포함해야 할 이들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주거형태, 불평등인식, 가구소득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전세거주 청년보다 자가거주 청년이,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에 지지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가거주와 높은 가구소득은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need)를 줄이는 효과와 정부지출 확대를 위한 세금부

표 6.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청년자립지원 정부책임성 인식		청년지원정책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		일자리지원정책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	
		β	t	β	t	β	t	β	t
성별	여성	0.06	0.67	-0.04	-0.42	0.17	1.85 †	-0.02	-0.14
연령대 (20대 전반)	20대 후반	0.21	1.61	-0.12	-0.75	-0.02	-0.11	-0.22	-1.25
	30대 전반	0.03	0.19	-0.01	-0.07	-0.20	-1.28	-0.28	-1.47
	30대 후반	-0.02	-0.10	-0.10	-0.57	-0.23	-1.41	-0.51	-2.64**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	0.12	0.80	0.21	1.17	0.04	0.23	0.18	0.93
	대학 졸업	-0.23	-2.45*	-0.03	-0.25	0.17	1.66 †	0.06	0.52
고용상태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0.05	0.42	0.03	0.21	0.40	3.13**	0.14	0.89
	학업, 훈련, 실업 등	0.10	0.89	0.12	0.91	0.04	0.29	0.04	0.27
	가사육아	0.03	0.21	0.20	1.11	-0.06	-0.38	0.05	0.23
혼인상태	미혼	-0.09	-0.83	0.05	0.36	0.10	0.82	0.01	0.06
주거형태 (자가)	전세	-0.08	-0.76	-0.31	-2.67**	-0.17	-1.52	-0.29	-2.19*
	월세	0.01	0.12	-0.03	-0.24	-0.37	-2.88**	-0.001	-0.01
불평등인식		-0.10	-3.00**	-0.12	-3.03**	-0.04	-1.02	-0.09	-1.96*
가구소득		-0.15	1.67	0.28	2.57**	-0.01	-0.10	0.09	0.69
상수항		1.03	0.76	-0.23	-0.14	3.81	2.55	1.92	1.06
R 제곱		0.062		0.078		0.072		0.073	
F값		1.95*		2.51**		2.29**		2.32**	

* () 속에 기준범주 표기
 *** p<.001 ** p<.01 * p<.05 † p<.10

담당력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변인은 한국 청년의 부모동거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자가 거주와 높은 가구소득이 청년지원정책의 정부지출 확대 지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추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태도에는 고용상태, 주거형태, 통계적 유의도가 다소 낮긴 하나 성별, 교육수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청년보다 자영업자·고용주 청년이, 월세거주 청년보다 자가거주 청년이, 남성 청년보다 여성 청년이, 중졸·고졸 청년보다 대졸 청년이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더 지지했다. 이는 자영업 폐업률과 수입 불안정성이 높고, 대부분의 고용정책이 임금근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청년이 일자리지원정책 지출 확대를 더 원하는 결과는, 남녀 간 차이 없는 교육성취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진·임금 등에서의 여전한 차별,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실의 문제를 방증한다. 그리고 청년자립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중졸·고졸청년들의 욕구가 높은 데 반해,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졸청년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졸·고졸청년의 고용상황도 열악하긴 하나, 대학졸업에도 불구하고 더딘 취업으로의 이행, 실업-구직-취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정 상황,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은 질적 미스매치 상황이 이러한 분석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에는 연령대, 주거형태, 불평등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앞서 평균차이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30대 후반보다 20대 전반 청년이 청년수당 제공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지원정책 정부지출 확대태도와 마찬가지로 전세거주 청년보다 자가거주 청년이,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청년수당 지원에 지지적이었다. 이는 자가거주 청년의 상당수가 부모와 동거중이어서 독립을 위한 소득지원수단으로서의 청년수당을 원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 2030 청년세대들이 자신들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고, 청년세대 내부에 존재하는 인식과

태도의 균열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 청년들은 대부분 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2.1%로 다수이긴 하나, 28.9%는 정부책임이 아니라고 답한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식의 균열지점을 분석한 결과, 대학졸업자보다 고졸이하 청년들이 정부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청년정책이 대학생 교육비 지원정책, 대졸청년 고용지원정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중졸·고졸 청년들은 정책관심 밖에 놓여 있었는데,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상당수의 청년들이 청년지원정책과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한 지출이 현재수준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49.5%가,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해서는 59.7%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는데,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들 중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지출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현재보다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의 절반가량에 불과하고 36.4%는 현재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세대를 결코 보편적 욕구를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가구소득이 높고 자가에 거주할수록 청년지원지출 확대를 찬성한다는 분석결과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들이 청년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일자리지원정책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고졸이하보다 대졸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자가, 월세 거주 청년보다 자가 거주 청년이 정부지출 확대를 더 찬성했다. 성별 요인의 경우, 네 가지 종속변인 중 유일하게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간의 청년고용정책이 남녀의 상이한 요구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청년 여성들이 취업준비과정 및 노동시장 내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청년

들이 일자리정책 지출 확대를 더 지지한다는 분석결과, 그간의 고용정책이 임금근로자 위주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청년 대상 창업지원정책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충분성과 적절성 등에서 한계적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 수립 시, 자영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상황과 욕구를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넷째,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를 기점으로 현재 청년수당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24.1%만이 청년수당에 찬성했다. 47.4%는 반대했고, 28.3%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물론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세대 청년들의 청년수당 찬성비율이 높긴 하나, 다수의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청년들 내부에서도 청년수당에 대한 의견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수당에 대한 청년세대 내 인식의 균열지점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청년수당에 대해 찬성했는데, 20대 전반과 30대 후반은 확인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현재 청년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청년정책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 중인데, 청년수당에 대한 필요와 선호는 주로 20대 초반 청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정부정책을 도입할 때 정책수혜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해당 정책 도입에 대한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역시 중요하다.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재원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년수당 등 현금성 소득지원의 경우, 세대 간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은 29.8%가 찬성했지만, 30대는 18.7%, 40대는 18.3%, 50대는 12.6%, 60대는 18.4%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 입장은 20대 39.5%, 30대 55.3%, 40대 60.3%, 50대 61.8%, 60대 이상 66.9%로 20대와 다른 연령대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향후 정책 도입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측케 한다. 동시에 청년수당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1].

반면, 청년세대 내 태도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보편적 지지 경향을 보여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의 분석 자료에는 청년지원의 다른 방식인 ‘교육, 주거,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도 있었다. 이 문항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대의 69.3%, 30대의 60.7%, 40대의 63.9%, 50대의 60%, 60대 이상의 62%가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청년지원 사회서비스 확대에 찬성했다. 이는 향후 청년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세대 내뿐만 아니라 세대 간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1].

결론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의 4가지 하위차원 중,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 일자리지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청년 내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와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청년세대에 속해 있다 해도,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 청년 개인과 그들이 속한 가구(부모)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청년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한 일률적인 정책설계를 해서는 안 되며,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삶의 현실과 청년 내부의 이질적 욕구 및 선호를 반영한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들이 속한 가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균열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영미,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 안상훈 외, *복지국가로의 전환기, 사회지출의 성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2]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3] 이승렬,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
 [4]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5] 이훈희, 김운태, “한국 대학생의 복지태도: Q방법론을 통해 본 세 가지 인식 유형,”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2호, pp.23-49, 2012.
 [6] 이상록, 김형관,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3호, pp.137-162, 2013.
 [7] 유정호, 조민호, “한국 청년세대의 신뢰·갈등과 복지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pp.171-207, 2016.
 [8] 이주희, “세대별 고용형태에 따른 복지국가 만족도 및 선호 비교,” *경제와 사회*, 제103호, pp.129-165, 2014.
 [9] 이정화, 문상호, “한국 복지국가의 향방에 대한 젊은 세대의 복지태도 예측:30대 및 40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46호, pp.165-194, 2015.
 [10] 신광영,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제81호, pp.35-60, 2009.
 [11]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제47집, 제2호, pp.27-52, 2016.
 [12] S. Svallfors, *The Moral Economy of Class. Class and Attitud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13] 안상훈, 김수완, 김영미,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 조사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4] 주은선, 백정미,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호, pp.203-225, 2007.
 [15] 김신영,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11권, 제1호, pp.87-105, 2010.
 [16] 김영순, 여유진,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91

호, pp.211-240, 2011.

- [17] 김수완, 김상진, 강순화,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택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2호, pp.67-90, 2014.
- [18] M. Mischke, *Public attitudes toward family policies in Europe: linking institutional context and public opinion*, Springer VS., 2012,
- [19] S. Svallfors,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38, No.2, pp.119-138, 2004.
- [20] S. H. Ahn,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ppsala: Universitetstryckeriet, 2000,
- [21] H. Andreß and T. Heien, *Explaining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German welfare stat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Conference on Recent Trends and Methods of Social Stratification Research, 1999.
- [22] 이성균, “한국사회 복지인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 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집, 제2호, pp.205-228, 2002.
- [23] S. Svallfors, “The Politics of Welfare Policy in Sweden: Structural Determinants and Attitudinal Cleavag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42, No.4, pp.609-634, 1991.
- [24]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세대갈등, 노인의 기여, 노인복지정책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228-241, 2015.

저 자 소 개

김 영 미(Young-Mi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7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비교사회정책, 복지인식, 젠더이슈